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 및 부서별 시정 업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행정의 문제를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 수행

2. 감사기간 및 장소

- 기 간: 2026. 9. 3. ~ 9. 11.(9일간)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및 감사 대상기관 또는 사업장 현지

3. 감사대상 기관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 33개
 - 본 청 : 20과(22개 부서)
 - 사 업 소 : 3사업소(3개 부서)
 - 동 : 7동(7개 부서)
 - 지방공기업 : 1공사

4. 감사대상 사무

- 2025. 5. 1. ~ 2026. 4. 30.까지 처리된 사무(단, 필요시 추가요구)
- 붙 임 :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무

5. 감사위원회 편성

- 감사위원 : 8명(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전원)
- 감사보조 : 4명
 - 전문위원 장창곤, 행정7급 장종원, 이예나
 - 속기사 배은주

6.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 감사방법

- 수감기관의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자료요구, 업무현황 청취, 시책질의 및 답변, 문서 확인 방법 등으로 실시
- 필요시에는 현지 확인 병행 실시

◦ 감사 진행 순서

-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선서서식 - 별지)
- 피감사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질의·답변 및 문서 확인
- 현지 확인 또는 참고인 출석 증언(필요시)
- 감사결과 강평
- 감사종결 선언

◦ 기타사항

- 감사일정 변경, 증인추가 선정, 추가자료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음.

7.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작성방법

-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 사전배부(별지)
-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종료 직후 위원들은 감사결과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취합하여 감사일정 종료 후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
- 피감사기관의 장은 수감내용을 감사종료 3일 이내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 (감사개요, 감사위원별 지적내용과 답변내용, 조치계획 등)

◦ 감사결과 처리의견

- 시정요구사항(잘못된 점 등에 대해 시정이 필요한 사항)
- 처리(개선)요구사항(시정은 아니더라도 불합리하여 해당기관이 처리해야할 사항)
- 건의(권고)사항(건의할 사항이나 희망사항)

※ 주요근거 서류(감사결과 증빙서류 - 별도 서면제출)

8. 감사일정

기 간	대 상	수 감 내 용	출석요구증인
9. 3.(목) 10:30 [2개 부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실시선언 및 위원장인사 ·증인 선서 ·서류검증 및 의견진술청취	선서 및 감사 부시장 해당 담당관
9. 4.(금) 10:00 [7개 부서]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미래도시전략과 ·세정과 ·징수과 ·정보통신과 ·서울사무소	·감사실시선언 ·증인 선서 ·서류검증 및 의견진술청취	선서 및 감사 기획조정실장 해당 과장 해당 소장
9. 7.(월) 10:00 [4개 부서]	·인구청년과 ·아이돌봄과 ·교육청소년과 ·가족정책과	·감사실시선언 ·증인 선서 ·서류검증 및 의견진술청취	선서 및 감사 미래교육돌봄국장 해당 과장
9. 8.(화) 10:00 [6개 부서]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회계과 ·공공시설과 ·민원봉사과	·감사실시선언 ·증인 선서 ·서류검증 및 의견진술청취	선서 및 감사 행정안전국장 해당 과장
9. 9.(수) 10:00 [4개 부서]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생활안정과	·감사실시선언 ·증인 선서 ·서류검증 및 의견진술청취	선서 및 감사 사회복지국장 해당 과장
9. 10.(목) 10:00 [10개 부서]	·평생학습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동 소관(7) ·구미도시공사	·감사실시선언 ·증인선서 ·서류검증 및 의견진술청취	선서 및 감사 해당 원장, 관장, 동장, 구미도시공사장, 본부장
9. 11.(금)	【최종정리】	·감사결과 보고서 최종 종합 정리	

9. 감사실시 결과

◦ 총 평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구미도시공사 등 33개 부서를 대상으로 총 1,144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 9. 3. ~ 9. 11.까지 9일간 집행기관 각 부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상태로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검증과 질의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80건(시정 10, 개선 65, 권고 105)의 지적사항을 이끌어 내었음.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 기획행정위원회는 주민 불편사항과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실시하여 시민의 권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행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음.
-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주요 사업의 추진성과 및 행정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보조금·수의계약·공모사업·연구용역 등의 관리 강화와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반복 이월사업 및 불용액 최소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당부하였음.
- 특히,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과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체계 강화를 주문하고, 공공시설 하자 관리, 감사 결과 공개·관리, 청렴도 향상 및 고충민원 대응 등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을 요구하였음.
- 아울러, 부서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고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음.

▷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 감사·홍보 분야는

- 공직유관단체 채용 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기준과 채용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업무 편람을 마련·공유하며 담당자 교육 강화를 요구하였음. 또한 공공시설 부설 공사 예방과 하자관리를 위해 점검기준을 마련하고, 시민감시단 등을 활용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음.
- 청렴도 향상을 위해 종합청렴도 등급뿐만 아니라 조직 내 청렴인식도와 체감도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고충민원과 비위·부패 신고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신속한 조사 및 처리결과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음. 아울러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와 관리·감독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음.
- 홍보 용역 및 언론광고의 선정·배분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하여 관내업체와 지역언론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보소외계층의 접근성과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음.
- 매년 상당한 규모의 홍보비가 집행되는 만큼 매체별 도달률·참여율 등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구미시대 배부량을 수요에 따라 조정할 것을 당부하였음. 아울러 제작비 증가에 따른 홍보효과와 각종 홍보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구미의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음.

□ 기획 분야는

- 주요 시정 현안과 공모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필요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 우선순위 설정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음. 또한 시장 공약은 단순한 완료율이 아닌 시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위원회와 연구용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등 정책기획 업무 전반의 내실을 높일 것을 당부하였음.
- 반복 이월 및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주민 편익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지연 및 집행 부진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도록 요구하였음. 또한 순세계잉여금과 공유재산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하였음.
- 주요 신공항 전략과 신도시 기반 조성 등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와 기업유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음.
- 지방세 감면 및 과오납에 대한 사후·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고, 체납 원인별 맞춤형 징수와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시민 대상 AI·디지털 지원과 주요 정보시스템의 백업·복구 체계 강화를 당부하였음.

□ 미래교육돌봄 분야는

-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정책대상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홍보와 운영방식을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정착과 생활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요구하였음.
- 긴급돌봄이 필요한 보호자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돌봄기관 간 연계 및 안내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사후관리와 사례 종결 기준을 내실화하도록 요구하였음. 아울러 읍면지역 지역아동센터의 인력 및 시설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당부하였음.
- 교육지원사업은 학교별 여건과 교육격차를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단순한 진학실적뿐만 아니라 실적 향상 정도도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음. 또한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복 지원방식 등은 학생과 업체의 부담을 고려하여 개선하도록 당부하였음.
- 청년여성 및 맞벌이 가정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사업의 참여와 집행률을 높이도록 요구하였음. 아울러 돌봄·안전 관련 사업의 지원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여 시민 체감도를 높이도록 당부하였음.

□ 행정·안전 분야는

-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인사 기준과 인력배치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인사이동 및 의전·의식행사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음.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와 직원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당부하였음.
-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대비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고, 외국인 주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안내 및 지원체계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였음. 또한 장기 미해결 생활민원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당부하였음.
- 자원봉사자 현황을 연령대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새마을 관련 사업은 참여대상과 운영방식을 다양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도록 요구하였음. 아울러 우수 자원봉사 및 복지사업이 중단되거나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당부하였음.
- 관용차량의 통합관리와 효율적인 배차체계를 마련하고, 대규모 공공청사 건립사업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음. 또한 공공시설의 하자 및 안전위험요소를 신속히 조치하고, 부서 간 협업과 주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와 출생통보제 자료를 정책 개선에 활용하도록 당부하였음.

□ 사회·복지 분야는

- 사회적 고립과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1인가구 및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스마트 돌봄사업의 대상 확대와 맞춤형 관리체계 마련을 요구하였음. 아울러 보훈 홍보 영상의 활용도를 높이고, 원스톱 복지서비스 구축을 검토하도록 당부하였음.
-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자 및 이용시설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상 문제를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음. 또한 노후 공동주택 경로당의 공간 부족에 대응하고, 경로당 지원기준을 재검토하도록 당부하였음.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횡단보도·버스정류장 등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무장애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요구하였음. 아울러 장애인 등록 관련 의료기관 정보를 홍보하고, 단기거주시설 수탁기관의 운영 역량과 관리체계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당부하였음.
-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 단계의 자격 확인을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미환수금 관리 및 환수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였음. 또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담당 직원 교육과 민관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복지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당부하였음.

□ 평생교육 · 동 행정복지센터 · 구미도시공사 분야는

- 평생교육 사업의 추진과정을 사전 점검하고 감사 지적사항의 재발을 방지하며, 강사 채용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채용 기준과 심사 절차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요구하였음.
-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국회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모사업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부서 간 공유를 통해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내실화하도록 당부하였음.
- 역사자료관은 조례 개정사항에 맞춰 홈페이지와 안내자료를 현행화하고, 주말 대관 운영을 확대하여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도록 요구하였음. 또한 박정희 대통령 생가 탐방 프로그램의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하였음.
- 동 행정복지센터는 생활쓰레기 관리와 민원 응대체계를 개선하고, 시설물 관리 및 주민 편의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요구하였음. 또한 자연차 직원의 자생단체 활동 및 행사 참여를 지양하도록 당부하였음.
- 구미도시공사는 시설물 안전점검과 개선사항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적기에 공개하도록 요구하였음. 또한 계약업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반복 지적을 예방하고, 주요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부담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당부하였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지적사항 건수

부 서 별 (직제순)	지 적 건 수				비 고
	총 건수	시 정	개 선	권 고	
합 계	180	10	64	106	
감 사 담 당 관	12	1	7	4	
홍 보 담 당 관	12		8	4	
정 책 기 획 과	10		4	6	
예 산 재 정 과	8	1	3	4	
미 래 도 시 전 략 과	8		2	6	
세 정 과	1			1	
징 수 과	5		1	4	
정 보 통 신 과	2			2	
인 구 청 년 과	17	2	4	11	
아 이 들 보 과	7		2	5	
교 육 청 소 년 과	7	1	2	4	
가 족 정 책 과	4		1	3	
총 무 과	10		5	5	
안 전 재 난 과	7		4	3	
새 마 을 과	9		3	6	
회 계 과	5		2	3	
공 공 시 설 과	5		2	3	
민 원 봉 사 과	5		1	4	
복 지 정 책 과	6		2	4	
어 르 신 복 지 과	4		2	2	
장 애 인 복 지 과	7		2	5	
생 활 안 정 과	2			2	
평 생 학 습 원	6			6	
서 울 사 무 소	1			1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6	2	1	3	
동 행정복지센터	6		2	4	
구 미 도 시 공 사	7	3	3	1	
전 부 서	1		1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감사담당관	개선	1. 명예감사관 전문성 및 활용도 강화 필요 ○ 명예감사관의 적극적인 감사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참여 유인책을 마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역할 강화 방안 마련 필요
감사담당관	시정	2. 공공시설 부실공사 사전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 공공시설 부실공사로 인한 세금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공사 점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감시단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감시를 통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감사담당관	권고	3. 감사 독립성 및 객관적 감사기준 강화 필요 ○ 외부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 감사 독립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감사기준을 마련하여 감사의 객관성 강화 필요
감사담당관	권고	4. 공직유관단체 채용 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관리 강화 필요 ○ 채용공고에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 기준을 명확히 기재하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필요.
감사담당관	개선	5. 자체종합감사 처분에 따른 이행여부 공개 필요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자체종합감사사항 조치내역에 실제 이행(회수, 미회수 금액, 미회수 사유 등)여부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 작성 필요.
감사담당관	개선	6. 갑질 신고 신속 처리 및 피해자 보호체계 마련 필요 ○ 갑질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조사와 조치를 실시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기준 마련 필요.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감사담당관	개선	7. 공공시설 하자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필요 ○ 시민운동장 트랙 이염 등 시설물 하자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 확인 및 사후 관리 강화 필요함.
감사담당관	개선	8. 반복 지적사항 예방을 위한 업무편람 마련 필요 ○ 일상감사에서 반복되는 사례를 업무편람으로 제작·공유하고 기술직 및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여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필요함.
감사담당관	개선	9. 청렴도 체감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종합청렴도는 2등급이나 조직 청렴인식도가 저조한 만큼, 조직 내 청렴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을 면밀히 파악하고 청렴인식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감사담당관	개선	10. 감사담당관의 고충민원 대응 역할 강화 필요 ○ 민원인이 감사담당관을 방문한 경우 단순히 소관 부서로 연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사담당관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 시 직접 감사·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대응 및 사후관리 역할 강화 필요.
감사담당관	권고	11. 비위·부패 신고 처리과정 관리 강화 필요 ○ 다양한 신고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각 채널별 신고 건수와 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집계·관리할 수 있는 통계 및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감사담당관	권고	12. 보조단체 감사 및 관리 강화 촉구 ○ 예산이 지원되는 보조단체에 대해 특정감사 등을 적극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홍보담당관	권고	13. 홍보 관련 업체 선정 기준 마련 및 지역업체 참여 확대 필요 ○ 홍보영상 제작 등 홍보 관련 용역의 관외업체 계약이 여전히 많은 만큼, 전년도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체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내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홍보담당관	개선	14. 언론광고 배분기준의 객관성 및 투명성 강화 필요 ○ 홍보비가 특정 언론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일관되고 투명한 집행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홍보담당관	권고	15. 지역언론 활용 및 활성화 강화 필요 ○ 지역 현안을 신속하고 깊이 있게 전달하는 지역 언론의 특성과 역할을 고려하여 홍보비 배분 및 홍보매체 활용을 확대하는 등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홍보담당관	개선	16. 홍보사업의 실질적 효과 측정 및 성과관리 강화 필요 ○ 매년 상당한 규모의 홍보비가 집행되고 있음에도 단순 홍보 건수와 집행실적 위주로 관리되어 실제 홍보효과를 수치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 홍보매체별 도달률·참여율·홈페이지 방문 증가 등 홍보비 투입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홍보담당관	개선	17. Yes구미 브랜드의 지속적 활용 및 현대화 필요 ○ ‘Yes구미’의 기존 정체성과 인지도를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홍보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홍보담당관	권고	18. 구미시대 제작비 증가에 따른 예산 효율성 검토 필요 ○ 2025년 대비 2026년 제작비가 크게 증가한 만큼, 단가 상승에 따른 홍보효과를 수치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
홍보담당관	개선	19. 시각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접근성 강화 필요 ○ 시각장애인도 시청소식지 구미시대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점자 소식지 등 맞춤형 홍보매체를 제작·확대하는 등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홍보담당관	권고	20. 구미시대 배부 홍보방식 개선을 통한 운영 효율화 필요 ○ 배부처별 수요에 따라 배부량을 재조정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QR코드 전면 배치 및 이·통장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홍보담당관	개선	21. 구미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된 홍보전략 강화 필요 ○ 구미 출신·연고 인재를 활용하여 지역의 특색과 홍보 파급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홍보대사 선정·임기·역할·해촉·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파급력 있는 콘텐츠 중심으로 홍보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홍보담당관	개선	22. 홍보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홍보 강화 필요 ○ 책자·영상·온라인 매체 등 매체별 특성과 파급력을 고려하여 홍보대상에 적합한 매체를 전략적으로 선택·활용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홍보담당관	개선	23. 홍보매체 선정의 투명성 및 효과성 강화 필요 ○ 홍보매체(옥외전광판 등) 선정 시 홍보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대상에 적합한 위치와 매체를 선정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쌀 등 농산물은 대형마트, 기업유치는 기업 밀집 지역 등 홍보 대상에 맞는 장소를 선정하는 등 전략적인 매체 활용이 필요함.
홍보담당관	개선	24. 구미시대 소상공인 쿠폰의 실질적 효과 및 환류 강화 필요 ○ 월평균 다운로드 건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쿠폰 사용 건수와 소상공인 매출증대 효과를 파악하고, 참여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정책기획과	개선	25.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정비 내실화 ○ 미개최·서면으로만 운영되는 위원회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기능과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실질적인 정비가 필요함. 특히 연속적인 서면 심사는 지양할 필요가 있음.
정책기획과	권고	26. 시장 공약사항 이행 관리 및 정보 공개 내실화 ○ 단순한 수치(완료율) 중심의 공약 이행을 평가를 지양하고, 시민이 실제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체감도 중심으로 공약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공약 사업 평가 시 ‘계획 수립·협약 단계’와 ‘실제 완료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은 총사업비와 완료 시기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정책기획과	권고	27.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기획과의 총괄 및 조정 기능 강화 ○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부서 간 협업이 필수적인 현안에 대하여, 의견 조정 및 유기적 연계를 이끌어내는 등 총괄 조정 부서로서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정책기획과	개선	28. 여성 인력풀 활용 및 위원회 담당자 교육 강화 ○ 가족정책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성 인력풀을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적극 활용하고, 위원회를 담당하는 주무관을 대상으로 회의록 작성·공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정책기획과	개선	29. 연구용역 추진 및 관리 철저 ○ 연구용역의 사고이월·중지·기간 연장 사유를 면밀히 관리하고, 용역 착수 전부터 사업의 범위와 조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불필요한 기간 연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정책기획과	권고	30. 법률전문인력 활용 및 직원교육 강화 ○ 법률전문관과 고문변호사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직원 대상 송무·법률교육을 강화하고, 법률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대응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정책기획과	권고	31. 위원 위촉의 전문성 및 중복 위촉 관리 강화 ○ 특정인이 여러 위원회에 과도하게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각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이 적절하게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정책기획과	권고	32. 공모사업 사전 검토 및 총괄 관리 강화 ○ 정책기획과가 공모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 검토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판단하고 추진 여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정책기획과	권고	33. 법무업무 조직 및 인력 운영 개선 ○ 법무팀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소송 지원과 의회협력 업무를 분리하거나 인력을 보강하는 등 업무체계 개선이 필요함.
정책기획과	개선	34. 구미시 정주여건 개선 및 정책적 대응 강화 ○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정책기획과가 정주여건 개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도로표시·표지판 정비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산재정과	개선	35. 지방보조금 증가에 따른 관리 강화 ○ 지방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별 필요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조금 증가에 대한 관리·통제 방안으로 보조금 사업 일몰제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산재정과	권고	36. 불용액 및 세수 오차 관리 강화 ○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세수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세입 추계 및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예산재정과	개선	37.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예산 조정 강화 ○ 성과평가 결과 미흡·매우 미흡한 사업은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차년도 예산을 동결·증액하는 일이 없도록 감액 또는 전액 삭감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예산재정과	개선	38. 반복 이월사업 관리 강화 ○ 이월사업의 발생 사유별 건수·금액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동일 사유의 반복 이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차년도 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예산재정과	시정	39. 예산 편성의 효율성 및 주민 편의 제고 ○ 반복 이월되거나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예산 편성 전부터 사업의 필요성·타당성과 주민 편익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예산재정과	권고	40.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 순세계잉여금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잉여재원의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예산재정과	권고	41. 시민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창출 예산 확대 ○ 시민 설문조사에서 경제·일자리 분야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분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만큼, 조사 결과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예산재정과	권고	42. 공유재산 관련 예산편성 절차 개선 ○ 공유재산 매입·매각 관련 세입·세출예산 요구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자료를 첨부하여 예산 편성 및 심사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미래도시전략과	개선	43. 조직개편에 따른 주요사업 연속성 확보 ○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라 주요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사업별 추진 이력을 체계적으로 정리·관리할 필요가 있음.
미래도시전략과	권고	44. 노후산업단지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경제자유구역 조성뿐만 아니라 기존 노후산업 단지의 활용계획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미래도시전략과	개선	45. 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기업유치 중심의 단계적 추진 필요 ○ 경제자유구역 지정 자체를 성과로 삼기보다 기업 수요와 입주 예정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신공항 조성 지연 및 산업단지 분양 시기 등을 고려하여 기업 유치가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미래도시전략과	권고	46. 포럼 등을 통해 발굴된 정책 성과 관리 강화 ○ 미래도시포럼 등에서 발굴한 정책이 공모사업·신규사업 등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를 성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표를 마련하고, 추진상황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미래도시전략과	권고	47. 문화선도산단 통합브랜드 사업 성과관리 강화 ○ 문화선도산단 통합브랜드 사업 완료 후 실제 활용 및 성과를 점검하고, 구축된 브랜드가 관련 사업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미래도시전략과	권고	48. 산동읍 불빛거리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불빛거리의 부족한 조명시설을 보완하고, 시설물의 시인성 및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
미래도시전략과	권고	49. 산동 불빛거리 시설물 관리 및 개선 요구 ○ 야간경관사업(고보조명)을 활용하여 희망메시지 등을 송출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 제고 필요 ○ 빔프로젝트 수리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미래도시전략과	권고	50. 야간경관사업의 지속적 활용방안 마련 ○ 야간경관사업이 연말 등 특정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데 그치지 않도록 계절·기간에 관계없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세정과	권고	51. 신뢰할 수 있는 공평한 지방세 과세체계 구축 지방세 감면유형별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고, 오류 발견 시 동일 위험군을 선별·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하고 공평한 지방세 과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징수과	권고	52. 체납 원인별 맞춤형 체납관리 강화 생계형 체납, 납기일 경과, 부도·폐업 등 체납 원인을 면밀히 분석·관리하고, 원인별 맞춤형 징수대책을 통해 체납액 징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징수과	개선	53. 납세태만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강화 납세태만을 사유로 장기간 체납한 사례에 대해서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강제징수 등 적극적인 특별징수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징수과	권고	54. 고액체납자 감소 원인 및 관리실적 구체화 고액체납자 수 감소가 완납, 소멸시효, 체납액 기준 미만 등 어떤 사유에 따른 것인지 감소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단순한 체납자 수 감소가 아닌 실질적인 징수성과를 확인·관리할 필요가 있음.
징수과	권고	55. 지방세 과오납 방지를 위한 선제적 관리 강화 지방세 과오납이 상당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요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과오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징수과	권고	56. 생계형 체납자 복지·행정지원 연계 강화 -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 원인을 파악하여 관련 부서와 연계한 복지·행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복지 연계에 따른 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체납 정리 실적을 데이터로 관리하여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정보통신과	권고	57. 시민 대상 AI·디지털 지원 강화 ○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시민의 AI·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정보통신과	권고	58. 주요 시스템 백업 및 복구 훈련 강화 ○ 해킹에 대한 대비로 주요 시스템 백업과 정기적인 복구 훈련을 통해 복구 시간을 단축해서 하기 바람.
인구청년과	권고	59. 사업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 ○ 단순 집행실적이나 추진실적 중심의 자료 작성에서 벗어나 사업별 성과지표와 산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인구청년과	권고	60. 청년 제안의 정책·예산 반영 강화 ○ 청년들의 제안이 단순한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및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자에게 채택 결과를 공유하며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인구청년과	권고	61. 면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강화 ○ 인구소멸 대응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과제 중 국가 차원의 법·제도 개선사항뿐만 아니라 구미시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정책도 있는 만큼,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계·추진할 필요가 있음.
인구청년과	권고	62. 전입학생 학업장려금 사후관리 강화 ○ 학업장려금 지원 이후 졸업·취업·가정 형성 등 구미시 실제 정착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인구청년과	시정	63. 청년근로자 지역정착 행복원룸사업 전면 재검토 ○ 청년 수요와 원룸 공급 간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실제 청년층의 주거 수요와 지역별 공급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목적과 지원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취지인 청년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원룸 리모델링 지원보다는 임차료 지원금 인상 등 청년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인구청년과	권고	6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각지대 대응 강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확인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인구청년과	권고	65. 청년 이탈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 청년의 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실제 정착에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을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음.
인구청년과	개선	66. 청년친화도시 공모 대응 강화 ○ 기존 미선정 사유를 분석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청년친화도시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인구청년과	개선	67. 구미영스퀘어 이용실적 및 성과관리 개선 필요 ○ 이용자 수요를 반영하여 공간·이용조건·행정절차를 개선하고, 단순 방문자 수보다 이용률·입주율·재방문율·만족도 등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인구청년과	개선	68. 구미영스퀘어 스몰웨딩 운영 활성화 ○ 이용실적이 저조한 스몰웨딩의 수요와 홍보 문제를 분석하고 시민 전체로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인구청년과	권고	69. 청년 문화·여가공간 확충 ○ 청년층의 다양한 문화·여가 수요를 청년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청년문화센터 등 실질적인 문화·여가공간을 확보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인구청년과	시정	70. 연구용역 업체의 전문성 검토 필요 ○ 향후 연구용역 발주 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수행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인구청년과	개선	71. 지역업체 활용 강화 ○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은 지역업체가 수행가능한 경우 지역업체를 우선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인구청년과	권고	72.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관련 사후 고용관리 강화 ○ 정규직 전환자의 사업 종료 후 고용유지 여부와 퇴사 사유를 관리하고 기업별 유지율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인구청년과	권고	73. 청년정책위원회 대표성 및 대응력 강화 ○ 청년정책위원회에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대 변화와 청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인구청년과	권고	74. 대학 어울림 페스티벌 대학생 참여 확대 ○ 대학생을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로 설정하고 프로그램 구성·운영에 대학생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인구청년과	권고	75. 관외 대학생 교통비 지원사업 재검토 ○ 관외 대학생 교통비 지원사업의 이용실적과 실제 수요를 재검토하고, 토익비 지원사업 등 청년 수요가 높은 사업과 비교하여 지원방식 및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아이돌봄과	개선	76. 업무추진비 공시 철저 ○ 업무추진비 공시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매월 집행내역을 빠짐없이 공시할 필요가 있음.
아이돌봄과	권고	77. 긴급돌봄 서비스 연계체계 강화 ○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여러 기관에 반복 문의하지 않도록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안내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이돌봄과	권고	78. 아이돌봄사 처우 및 돌봄서비스 개선 ○ 아이돌봄사의 장기근속수당, 교통비 및 단시간 돌봄 수당 등 처우 개선사항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음.
아이돌봄과	권고	79. 읍면지역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 읍면지역 지역아동센터의 부족한 인력과 지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기업 후원 등 지역 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적극 연계하여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시설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시비를 적극 투입하여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이돌봄과	개선	80.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자료 작성 구분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사례결정위원회를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 및 운영을 하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에 구분해서 작성
아이돌봄과	권고	81.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아동학대 신고·처리에 그치지 않고 원가정 복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사례 종결 및 사후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재학대 및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아이돌봄과	권고	82. 아픈아이돌봄센터 이용자 관리 체계화 ○ 이용자 수 집계 시 중복 이용을 제외한 실이용자 인원수를 기준으로 관리하여 정확한 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교육청소년과	권고	83.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체계적 관리 필요 ○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라 추진한 신규·대표사업을 기존 사업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향후 특구 지정 해제 시 해당 사업의 지속·중단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교육청소년과	권고	84. 교복업체 재고 부담 완화 ○ 교복업체의 선구매에 따른 재고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물지원 방식의 개선을 검토하고,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교육청소년과	권고	85. 진학진로지원센터 상담이력 관리 강화 ○ 학생별 상담이력을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여 상담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교육청소년과	시정	8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 및 성과관리 ○ 관계기관에 전달한 것만으로 ‘조치완료’로 기재하는 등 형식적인 처리에서 벗어나, 지적사항에 대해 실제 취한 조치와 그에 따른 개선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교육청소년과	권고	87. 교육역량강화공모사업 평가기준 개선 ○ 학교별 기존 역량 차이를 고려하여 단순 진학실적 뿐만 아니라 진학실적 증가율 등 향상 정도를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교육청소년과	권고	88. 인터넷 수능강의 지원방식 개선 검토 ○ 조건부 사후지원 방식으로 인해 취약계층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교육청소년과	개선	89. 교육경비 지원 및 심사 내실화 ○ 교육경비 지원기준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재정여건과 교육수요를 반영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육경비 사업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서면 심사를 지양하고 대면심사를 통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가족정책과	권고	90. 워킹맘 힐링프로그램 확대 추진 ○ 2030 청년여성의 의견과 수요를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프로그램을 보완·확대하고, 참여자 중심의 운영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가족정책과	개선	91.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사업 실효성 제고 ○ 사업물량을 확보하고도 실질적인 사업 활용이 저조한 만큼, 기업 자부담 비율 등 사업조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확보된 물량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가족정책과	권고	92. 우리집 경호원 파견사업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 지원대상과 이용기간 등 사업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 종료 후에도 연장 이용이 필요한 대상의 수요를 파악하는 등 사업 이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돌봄·안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가족정책과	권고	93. 안심비상벨 운영 및 관리 강화 ○ 2025년에는 기재된 허위신고 건수가 2026년에는 누락된 만큼, 연도별 신고 및 허위신고 현황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여 누락 없이 기재할 필요가 있음. ○ 허위신고 등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안심비상벨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제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총무과	개선	94. 민간위탁 사무의 공개모집 및 성과평가 관리 강화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 원칙을 준수하고, 성과평가 실시 여부 및 홈페이지 공개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누락된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총무과	권고	95. 인사이동 조서 공개와 발령일 간 충분한 시간 확보 인사이동 조서 공개 후 직원들이 새로운 보직과 업무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조서 공개일과 발령일 사이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최소 5일 이상)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총무과	개선	96. 인사 기준의 객관성 및 적정성 강화 - 적재적소·전문성·공정성 등 인사원칙에 따라 읍면동 결원 및 직렬 불일치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조직감사 지적사항 포함)하여 적절한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AI 역량검사 결과의 인사 활용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직급 결정 또는 상향 시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
총무과	권고	97. 주민자치회 전환 및 활성화 추진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변단체로 인식되지 않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읍면동별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주민자치회 전환 기반 마련 및 활성화(주민자치위원회 회의비 지급 등)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총무과	개선	98. 의전 및 의식행사 운영기준 마련 의전 및 의식행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수렴을 거쳐 의전·의식행사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총무과	개선	99. 공무원 교육훈련 관리 및 승진 관련 재발방지 강화 ○ 공무원 상시학습시간 산정 오류, 교육훈련 실적 중복 입력 등의 문제가 발생한 만큼, 교육훈련 실적에 대한 전산 자동검증 및 담당자 이중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승진요건 확인 과정에서 유사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총무과	권고	100.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평가 및 인센티브 강화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활동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 및 우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총무과	권고	101.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사업 의견수렴 강화 ○ 공무원의 안정적인 주거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주거기금 관련 사업은 직원 및 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람.
총무과	개선	102.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처리결과 피드백 강화 ○ 주민간담회(현장소통시장실)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해 추진단계, 담당부서 및 완료 목표 시점 등을 주민에게 안내하고, 처리결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등 건의사항 접수에 그치지 않고 결과까지 환류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총무과	권고	103. 각종 대회 시상 훈격 배분의 형평성 제고 ○ 각종 대회 개최 시 특정 훈격에 편중되지 않도록 상장 배분을 적절히 조정하여 시상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안전재난과	권고	104.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지휘체계 강화 ○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 행정기관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 간 역할과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 지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안전재난과	개선	105. 생명구조타올 관리 및 전수점검 강화 ○ 생명구조타올은 제조일로부터 3년간 사용이 가능한 만큼, 현재 비치된 제품의 제조일자 및 사용 가능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사용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교체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안전재난과	개선	106.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철저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 과정에서 점검일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일자 등 관리대장을 철저히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안전재난과	개선	107. 시민안전보험 보장체계 및 사고예방 기능 강화 ○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필요한 보장항목과 보장범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험 운영에 반영하고, 보험금 지급내역을 분석하여 사고 유형 및 발생 빈도가 높은 분야를 파악하는 등 관련 데이터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안전재난과	권고	108. 폭염 대응시설 관리 및 특화사업 발굴 ○ 기존 그늘막 등 폭염 대응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그늘막 의자 설치 등 주민 제안사항의 취지를 검토하여 반영하는 한편, 구미시 실정에 맞는 선제적인 폭염 특화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안전재난과	권고	109. 재난대비 훈련의 실효성 강화 ○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대비 훈련을 보다 자주 실시하고, 실제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 시기와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안전재난과	개선	110. 외국인 주민 시민안전보험 지원체계 강화 ○ 등록외국인 근로자도 시민안전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언어 및 신청절차 등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외국인 주민 현황을 반영한 다국어 안내자료(리플렛 등)를 마련하고 보험금 청구부터 보상까지 지원이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새마을과	권고	111. 자원봉사자 연령대별 데이터 관리 ○ 자원봉사자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데이터를 연령대별로 구분·관리할 필요가 있음.
새마을과	개선	112.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 강연 사업 확대 및 참여 대상자 확대 방안 모색 ○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 강연 사업이 당초 계획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집행현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강연 횟수 증가, 우수 강사진 섭외, 찾아가는 리더십 강연 등으로 운영방식을 확대하며 강연 수강대상도 청년층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새마을과	개선	113.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확대 검토 ○ 저출생 시대에 맞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의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새마을과	권고	114.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기준 및 매뉴얼 마련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지역 및 주민의 수요에 맞게 적재적소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선정 및 예산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새마을과	권고	115. 청년·가족 중심의 신규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 ○ 자원봉사자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봉사 인력 확보를 위해 청년 및 가족 단위의 신규 자원봉사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새마을과	권고	116.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확대 ○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충분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봉사활동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새마을과	권고	117. 주민숙원사업 추진범위 및 기준 명확화 ○ 주민숙원사업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 선정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새마을과	개선	118.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 및 보조금과 관련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전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고, 사업 완료 후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사후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단계백일장, 도시락봉사 등 기존 우수 사업이 중단되거나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시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새마을과	권고	119. 장기 미해결 생활민원에 대한 적극행정 강화 ○ 장기 미해결 생활민원에 대해서도 난제라는 이유로 검토를 중단하기보다,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가능한 대안을 찾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회계과	권고	120. 관용차량 효율적 운영 및 출장 편의 제고 ○ 부서별 관용차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스마트 배차시스템을 구축하여 차량 이용 현황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출장 수요에 비해 관용차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만큼 필요한 차량을 확충하여 실무공무원의 출장 편의를 높이고, 개인차량 이용 시 지급되는 출장 여비도 현실적인 여건을 일부 반영할 필요가 있음.
회계과	개선	121. 청사 내 안전위험요소 신속한 개선 ○ 열린나래 카페의 노출된 전선 등 청사 내 안전위험요소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일반 민원인의 안전 관련 신고사항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회계과	권고	122. 대규모 공공청사 건립사업 재정관리 강화 ○ 대규모 공공청사 건립에 과도한 예산이 일시에 투입되지 않도록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예산편성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회계과	권고	123.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철저 ○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침과 계약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서별·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회계과 (복지정책과)	개선	124. 사회복지국 부서 본청 배치 ○ 분산된 사회복지국 소관부서를 본청에 배치하여 노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여러 부서를 찾아 이동하지 않고 한곳에서 복지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공시설과	권고	125. 공공건축사업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 ○ 공공시설물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공공 건축사업 추진 시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공시설과	권고	126. 공공건축 품질검사 및 하자 예방 강화 ○ 품질검사 대상 사업에 대한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 하여 민간전문가 및 품질검사단의 참여와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하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공공시설과	권고	127. 공공건축물 하자 책임 및 사후관리 강화 ○ APC 누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수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하자보수 기간 내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공공시설과	개선	128. 사업부서와 공사부서 간 협업 및 주민소통 강화 ○ 사업부서와 공사부서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업무 추진 과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초기단계부터 지역구 의원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공공시설과	개선	129. 공공시설과 지원부서 역할 강화 공공시설과는 행정안전국 소속의 지원부서임을 각별히 유념하여, 각 부서의 공공시설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부서 간 협업과 지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민원봉사과	권고	130.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개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 보완 등을 통해 민원서비스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민원봉사과	권고	131. 출생통보제 자료와 복지정보 연계 강화 출생통보제 자료를 활용하여 미혼모·위기가정 등의 정보를 관련 부서와 연계하고, 위기아동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민원봉사과	권고	132. 디지털 소외계층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지원 강화 경로당 어르신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복지과·평생학습원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사용방법 교육 및 안내를 추진하는 등 이용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음.
민원봉사과	개선	133.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 안내 강화 지문인식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지문 재등록 방법 등 이용 안내문을 무인민원발급기 주변에 부착하고, 안내문이 누락된 곳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민원봉사과	권고	134. 점심시간 민원업무량 분석 및 휴무제 검토 읍면지역과 동 지역의 점심시간 민원업무량을 구분하여 파악하고, 업무량이 적은 곳은 직원의 점심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민원창구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복지정책과	개선	135. 왕산 허위 선생 기념관 운영 및 유물 관리 개선 ○ 왕산 허위 선생 기념관의 소장 유물의 전시·보관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전시 유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예산 증가에 맞춰 기념관 운영 및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운영주체의 전문성 및 성과를 검토하여 필요시 운영주체 변경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향후 민간위탁 운영 시에는 학예사 등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한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복지정책과	개선	136. 왕산 허위 선생 기념사업 및 서훈·홍보 지원 ○ 미서훈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적극 찾아 서훈 신청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매체 등을 활용해 기념관 및 관련 사업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복지정책과	권고	137. 스마트 돌봄 및 1인가구 지원체계 강화 ○ AI 스피커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사업의 대상에 청년층을 포함하는 등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복지정책과	권고	138. 영상 콘텐츠 활용 및 보훈 홍보 확대 ○ 6.25행사 제작 영상의 소유권 및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일회성 활용에 그치지 않도록 버스정류장 등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에 지속 활용하여 영상 제작의 의미와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복지정책과	권고	139. 유공자 예우·지원 강화 ○ 참전명예수당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타지역 수당 고려), 시에서 참전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보훈예우수당 관련하여 경상북도에 65세 연령 제한 완화를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음. ○ 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의미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념·예우사업을 발굴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복지정책과	권고	140.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실효성 제고 및 지원계획 정비 ○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부서 및 사업 추진체계를 재 검토하고, 필요시 타 부서 이관 등을 검토하여 조례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관련 사업이 반영되어 있는지 재확인하고, 관련 내용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어르신복지과	권고	141. 미등록 경로당 지원 강화 ○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및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1사1경로당 결연 및 업체 협약·기업 후원 등을 활용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어르신복지과	권고	142.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개선 ○ 경로당 배식도우미 사업의 중도 포기 및 업무상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참여자와 경로당의 만족도 및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어르신복지과	개선	143. 노후 공동주택 경로당 공간 부족 해소 노인인구 증가로 공동주택 내 경로당이 협소해지는 문제에 대응하여 추가 공간 확보 및 신규 경로당 조성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어르신복지과	개선	144. 경로당 지원기준 개선 및 다양한 대안 검토 노후화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로당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 경로당 조례에만 한정하지 않고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모듈러 건축물 등 다양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복지과	권고	145. 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관리 강화 - 소관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사업비 감액·삭감 등 실효성 있는 페널티를 부여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유도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사업 성과평가 방식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평가부서와 협의하여 평가기준 및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복지과	권고	146.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준비 철저 신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개소 후 즉시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 및 시설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복지과	권고	14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예방 및 홍보 강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시 대상자에게 표지의 올바른 사용 방법 및 준수사항을 안내·교육 필요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사전경고 시스템 도입 등 위반 예방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장애인복지과	개선	148.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 단속 및 대응 강화 ○ 시민 신고에 의존한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에 대한 자체 단속을 적극 실시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부당사용을 근절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복지과	권고	149. 장애인 등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적극 홍보하여 장애인 등록 절차의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음.
장애인복지과	개선	150. 장애인 이동편의 및 무장애 환경 개선 ○ 관공서·역사·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횡단보도·버스정류장 등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집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사업이 장애인의 실제 이동편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장애인복지과	권고	151.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수탁기관 관리 강화 ○ 기존 장애인 복지시설의 평가 및 행정처분 사례를 참고하여 신규 단기거주시설 수탁기관 선정 시 관리·운영 역량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설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생활안정과	권고	152. 부정수급 사전예방 및 환수관리 강화 ○ 초기 수급자 선정 단계에서 자격 및 요건을 면밀히 심사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미환수된 부정수급액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수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생활안정과	권고	153.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 및 현장 대응 강화 ○ 읍면동의 발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위기 가구를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읍면동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평생학습원	권고	154. 평생학습 관련 공모사업 적극 발굴 및 선정 노력 ○ 2027년도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 공모사업의 취지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여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평생학습원	권고	155.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재취업 교육 확대 및 홍보 ○ 현재 취미·여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 과정을 점검하고, 퇴직자 등 시민의 재취업 및 직업역량 강화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강좌를 확대 개설해야함. 또한 다양한 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홍보하기 바람.
평생학습원	권고	156. 평생학습 성과의 지역사회 환원 및 참여 활성화 ○ 평생학습 참여자들이 교육을 통해 습득한 재능을 동아리 활동, 재능기부, 로비음악회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에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학습 성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여 학습원은 교육 과정을 홍보하고, 참여자는 성취감을 높이며, 시민은 새로운 학습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평생학습원	권고	157. 평생학습 프로그램 신규자 참여기회 확대 ○ 일부 강좌의 중복수강자가 많은 만큼 신규 참여자에게 우선적으로 수강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강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인근 주민들의 수강 참여가 가능하도록 관리 바람.
평생학습원	권고	158. 대학협력직업능력특화과정(내일대학) 감사 지적사항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강화 ○ 대학협력직업능력특화과정(내일대학) 사업에서 2개 학교가 감사 결과 ‘주의’ 처분을 받은 만큼, 부서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사전 점검과 자체 확인을 강화하여 유사한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평생학습원	권고	159. 평생교육 강사 채용의 공정성 및 청렴성 강화 ○ 평생교육 강사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채용절차를 철저히 관리하고 관련 기준 및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서울사무소	권고	160. 인적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국비 확보 및 협력 강화 ○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 구미시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국비 확보 등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한편, 주요 사업과 예산 관련 사항을 의회와 공유하여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권고	161.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명확화 ○ 역사자료관 무료입장 기간을 2026. 12. 31.까지로만 기재할 경우 이후 유료 전환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운영방안이 논의·검토 중인 사항이라면 이를 명확히 표기하여 자료작성 시 시민과 의회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시정	162. 역사자료관 안내사항 및 홈페이지 현행화 ○ 현행 조례와 역사자료관 홈페이지 및 안내문 등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전수점검하고, 조례 개정 사항에 맞게 홈페이지 등 관련 안내사항도 즉시 현행화하기 바람.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시정	163. 역사자료관 대관 운영시간 개선 ○ 현재 평일 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관을 주말에도 예약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확대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음. ○ 통합예약시스템에는 주말 예약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예약이 불가능하여 시민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주말 대관을 실제 운영하거나 시스템 안내를 즉시 정비하는 등 이용자 혼선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개선	164. 민족중흥관 동영상관 운영 및 홍보 활성화 ○ 정해진 상영시간에 관람객이 없다는 이유로 상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만큼, 상영시간에는 관람객 유무와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권고	165. 역사자료관 입장료 운영 재검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향후 입장료를 유료로 전환할 경우 관람객 감소 및 타 박물관·역사관 등에 비해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만큼, 유료 전환에 앞서 관람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료·할인 혜택 등 시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역사자료관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권고	166. 박정희 대통령 생가 탐방 프로그램 활성화 ○ 전년도에 비해 탐방 프로그램 참여 횟수가 감소한 만큼,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인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동 행정복지센터	개선	167. 생활쓰레기 배출질서 확립 ○ 생활쓰레기 및 분리배출 위반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배출시간 준수에 대한 계도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적정한 행정 조치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동 행정복지센터	권고	168. 각종 관변단체 활동 및 행사 저연차 직원 참여 지양 ○ 관변단체 활동 및 각종 행사의 저연차 직원 참여를 지양하고, 상급자가 참여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동 행정복지센터	권고	169. 시설물 현황조사 적극 지원 및 관리 강화 ○ 시설물 현황 조사 시 읍·면·동에서 관할 지역 내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담당부서와 공유하고,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사항도 누락 없이 기록·관리하여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동 행정복지센터	개선	170. 동 문화센터 이용기회 확대 ○ 동 문화센터 이용 시 소속 동 주민을 우선하여 신청받되, 잔여 자리가 있는 경우 타 동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 행정복지센터	권고	171. 지역 봉사단체 참여 활성화 및 인력 발굴 ○ 지역 관변·봉사단체의 회원 중복 및 참여 문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주민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봉사인력을 적극 발굴 및 관련 운영 기준 마련 필요.
동 행정복지센터	권고	172. 민원 응대 및 주민 편의서비스 강화 ○ 읍·면·동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방문 안내체계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친절교육과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구미도시공사	개선	173. 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선 관리 강화 ○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지적사항 및 개선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구미도시공사	시정	174. 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공개 및 관리 철저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및 이행결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클린아이 및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적기에 공개하여 시민들에게 관련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구미도시공사	개선	175. 계약업무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 수의계약 등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구미도시공사	권고	176. 장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 기존 산업단지의 미입주 및 분양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제한 완화 등 기존 산업단지 활용방안과 비교하여 장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미도시공사	개선	177. 일상감사 자료 작성 및 관리 철저 ○ 일상감사 자료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수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단순 수치만 기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요 사례 및 사유 등을 함께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자료의 이해도와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구미도시공사	시정	178. 재난안전 매뉴얼 및 안전관리체계 강화 ○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난안전 매뉴얼을 점검·보완하고, 우수 안전관리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시설별 안전관리계획을 내실 있게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구미도시공사	시정	179. 종합감사 실시 및 결과 공시 철저 ○ 「구미도시공사 감사규정」에 따른 2년 주기의 종합감사가 적정하게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부서는 감사결과가 클린아이에 공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감사 실시 및 결과 공시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전부서 (정책기획과)	개선	180. 조례 용어 일괄 개정 ○ ‘담당계장’으로 규정된 사항을 ‘담당팀장’으로 정비(정책기획과 주관 일괄개정)